

얼마나 투명하여야 충분한가? - 원자력 안전 규제의 투명성에 대한 고찰 -

최 광 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머리말

오늘날 원자력 안전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공학적 안전성 외에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개념들이 사용

되고 있다. 신뢰, 독립성, 공개성,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 합리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등이 그것이며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국민 안심 등도 이야기되고 있다¹⁾.

특히 최근에 원자력 안전 규제의 투명성(transparenty) 혹은 공개성(openness)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정책성명에서 규제 5원칙 중 하나로 공개성을 천명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 현장에서도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IAEA의 원자력안전협약에서도 규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OECD/NEA/CNRA의 WGPC²⁾는 일본에서 ‘규제 활동의 투명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왜 이렇듯 원자력 안전 규제의 투명성이 국제적·국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가? 원자력 안전 규제는 사업자의 전력 생산을 위한 원전 건설 및 운영 활동을 포함하는 원자력 관련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다. 이는 또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기도 하다.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공학과 석사, 박사.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센터 월성원자력발전소 주재원, 고리, 영광, 울진, 월성 정기검사 PM, 홍보자료실장, 국제협력실장, 교육훈련실장, 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1) 필자는 그 동안 원자력 안전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 대중 신뢰, 안전에 대한 국민 안심 등에 대하여 <원자력산업> 기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2) CNRA는 OECD의 원자력기구(NEA) 산하의 규제활동위원회(Committee on Nuclear regulatory Activities)이다. WGPC는 이 CNRA가 대중 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에 대한 토의를 목적으로 구성된 실무반(working group)이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실무 논의 외에 신뢰(trust)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2000년에는 ‘신뢰에의 투자’라는 주제로 파리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04년에는 ‘규제 기관에 대한 public confidence의 구축, 측정 그리고 향상’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오타와에서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규제 활동의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 것이다.



투명하지만 형상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규제의 목적은 사업자의 전력 생산 활동에 의하여 초래되는 방사선의 리스크를 사회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는지, 즉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하는 것이며, 이에 미흡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정부가 규제 활동을 함으로써 안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안심성을 제공하는 것이 그 궁극적 목적이다.

이러한 안심 제공에 필요한 요소로서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그 신뢰의 한 축으로서 투명성이 있다. 그러므로 규제 기관이 목적하는 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외에 이를 위하여 규제 기관이 투명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지난 2007년 5월 일본에서 개최된 규제활동의 투명성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 활동의 투명성을 정의하며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한 후 안전규제 투명성 관련 향후 예측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규제 투명성 논의의 배경

1. 투명성이란?

투명성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물체를 통하여

사물을 볼 수 있을 때 그 물체가 갖는 특성(Transparency is the quality that an object or substance has when you can see through it)을 말한다. 그리고 어떤 과정이나 상황의 투명성이란 그와 관련한 비밀이 없거나 그것이 명확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되고 인식되는 성질(quality)이다³⁾. 한편 광학적으로는 어떤 물체를 빛이 투과하여 감쇠됨이 없이 원 모습대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전반적 교육 수준의 상승, 시민 의식의 성숙, 이해 관계자들의 각종 요구 증대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NGO들의 활성화 등은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다. 이와 함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디지털 기술의 진화로 일반 기업들과 공공 부문에서의 전자 결재 시스템의 일반화, 그리고 전자 정부의 등장 등은 우리 사회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⁴⁾. 하드 카피로부터 전자 문서로 문서 체계가 이동함으로써 자료나 문서는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행위가 없이도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들은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국민들이 보다 더 쉽

3) The transparency of a process, situation, or statement is its quality of being easily understood or recognized, for example because there are no secrets connected with it, or because it is expressed in a clear way.

4)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카메라의 소형화 경량화와 가격 저하 등은 감시 카메라를 보편화시켰고 모바일 기술의 발달, 사이버 공간의 등장 등은 우리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앞으로 이 세계는 소극적인 정보의 공개, 단순히 투명성의 향상 차원이 아닌 이해 관계자들의 tele-presence 라는 다른 형태의 투명성을 요구 받을 것이다.

게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규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 활동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외부에서 가감 혹은 왜곡 없이 볼 수 있다면 내부자들이 그 들여다보는 시선을 의식할 것이므로, 사실상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도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정부 행정에서 투명성은 반부패와 연결되어 있는데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3년 설립되어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세계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⁵⁾.

규제의 투명성은 정부 규제 업무 종사자의 반부패의 문제와 연관되는데, 즉 피규제자와의 업무 유착, 금전 수수, 이권 개입, 로비 영향력 행사로 인한 규제 의사 결정 과정의 왜곡 등에 대한 우려가 규제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⁶⁾. 그러므로 규제의 투명성은 규제 기

관의 윤리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원자력 관련 활동의 투명성

원자력 관련한 투명성에 대해서는 먼저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의 무기 개발로 사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핵투명성이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왔다. 이 핵투명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사찰 등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IAEA의 중요한 업무이다. 원자력 안전 규제의 투명성은 근래에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IAEA가 주도하는 원자력안전협약 검토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OECD/NEA에서는 규제 기관의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구성된 WGPC가 주관하여 2000년 Investing in trust, 2004년 Public confidence 워크숍(캐나다 개최)을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이 투명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07년 일본에서 본 투명성 워크숍을 개최한 것이다.

OECD/NEA WGPC 투명성 워크숍 (5.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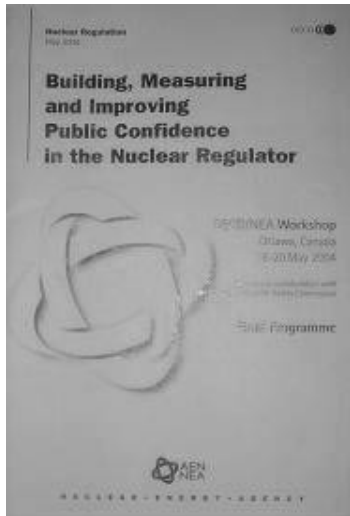
지난 2007년 5월 22일 일본에서 OECD/NEA의 CNRA와 일본 규제 기관인 NISA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본 워크숍은 각 회원국의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투명성 제고 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규제 기관에게 거는 투명성 관련 기대를 이해하며 투명성 제고 활동이 규제 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워크숍은 WGPC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일련의 워크숍 중의 하나로 2000년 파리에서 개최된 Investing in trust, 2004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Public confidence 워크숍에 이어 2007년 일본에서 본 투명성 워크숍을 개최한 것이다.

본 워크숍은 4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째는 투명성의 이해, 두 번째는 투명성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기대, 규제 활동 투명성 제고의 조건, 네 번째 투명성 제고

5) 파리, 홍콩, 요하네스버그 등 세계 각지에 100여개 이상의 단체가 산하 지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반부패국민연대'가 한국 지부 역할을 하고 있다. 1995년에 부패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만들어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부패 지수는 각국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부패 조장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이 각국 정부와 기업의 부패 실태를 조사한 다음 종합하여 평균치를 내는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부패도가 높다. 부패지수의 경우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주로 북유럽 국가가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효율적인 행정 감시 제도와 투명성 높은 국가 경영 시스템을 일찍이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4.29점을 시작으로 96년 5.02점 1997년 4.29, 1998년 4.2, 1999년 3.8점 등 2004년까지 5점을 넘지 못했으며 2005년 5.0점 2006년 5.1점으로 163개국 중 42위를 기록하여 아직 부패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6) 프랑스는 2006년 6월 '원자력안전 및 투명성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위원회 형태의 독립적인 행정 기관인 원자력안전청(ASN:Nuclear Safety Authority)를 설립하였다. 이는 과거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국(DGSNR)이 산업부, 환경부, 보건부 산하의 정부 부처로서 가졌던 규제 독립성 문제를 해소하고 규제 투명성을 향상시켜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 여러 나라의 원자력 관련법 들 중에서 법령 이름에 투명성이라는 용어를 넣은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이다.



관련 활동사례 발표로 구성되었다. 각 세션의 주요 발표 및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션 1: 투명성의 이해

본 세션에서는 그 동안 규제 활동의 투명성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투명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세션이었다.

John Loy 호주 ARPANSA 원장은 투명성이란 소극적 정의로는 규제 기관이 의사 결정 기준을 사후에 이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것(정보 공개 포함)이며, 적극적 정의로는 규제기관이 의사 결정 기준을 사전에 이해 관계자들에게 미리 제시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후에 규제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규제 기관의 투명성 제고 원칙으로서 규제 기관의 규제 결정

과정을 명확히 명시 기술하며 대중이 규제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규제 결정은 이해 관계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규제 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정보는 명확하게 문서로 기술되어 규제 기관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 기관의 종합적인 평가가 연보 형태로 대중에게 전달되며, 규제 기관은 대중을 설득하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적극적인 대중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Youjiro Ikawa <요미우리> 신문 기자는 Nagano 시청이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glassed-in office’를 만들고 투명성 제고 활동을 홍보하였지만 정작 정보나 자료 제공에는 투명하지 않아 ‘전시 행정’으로 끝남을 지적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도 중요하나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투명성을 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정부나 사업자의 정보 전달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증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 또한 정보 수용자 측에서도 판단과 이해를 위한 공부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한국의 김호기 부장은 투명성을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의 한 요소로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대중 신뢰의 구성 요소로서 규제 역량/능력, 투명성을 포함한 정보 공개, 말과 행동의 일

치, 아이디어와 가치 공유, 배려, 의사소통 등이 있다고 하였다.

2005년 OECD/NEA가 정의한 대중에의 공개 개념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법을 언급하였다. 즉 정보 공개 관련법 등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 정보의 검색, 선택, 통합 등이 전자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연보, 운전 정보, 전략 계획, 법제화 계획 및 과제 등을 문서로 발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규제 투명성은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원자력산업 관련법,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며, 운전 투명성은 관련법에 따른 원자력 시설 운전의 안전성 지표/ 관리 및 조직의 투명성 강화하는 것이고 규제 업무 투명성은 규제자의 원자력 안전성 증진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이며 이는 대중 신뢰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고려하는 위험 관리(Risk Governance) 관점에서의 투명성을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의 공개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공동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션 2: 투명성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기대

본 세션에서는 투명성에 대하여 여러 이해 관계자(stakeholders)들의 기대하는 바를 발표하였다.

OECD/NEA 사무차장 Mr. Takanori TANAKA는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는 투명성과 연결된다고 하고 대중의 참여는 현 상황, 각국의 법체계, 문화 등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해 관계자의 참여에 대응하는 업무에 자원을 배분해야 하며, 외부 이해 관계자는 물론 내부 스태프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해 관계자 신뢰 포럼”에서 폐기물 관리의 틀이 전문가들의 참여로 정립되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 신뢰의 요소로서 의사 결정 과정, 지방 자치 Authority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의 행동,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정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 결정 메커니즘과 이해 관계자 참여도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며, 투명성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기대는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참여도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 주요 요소로는 정보의 투명성,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 의사 결정 참여가 있다.

조홍섭 <한겨레> 신문 환경전문 기자는 투명성 제고 활동이 증가하고, 안전 우선의 철학이 확산되는 데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고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도나 인지도는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그 원인으로 규제 독립성의 문제를 들었다. 그는 규제 기관의 정체성 즉 규제 기관은 누구를 위해 (국민/산업) 일하는가? 원자력산업과 같은 패밀리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현재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일방향적으로 보고, 규제 기관이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수용자 입장에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므로 개방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규제 기관이 어떤 사실을 공개할 때는 다른 관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제하여야 하나 규제 기관은 마치 스스로 실수나 불확실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였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정보를 제공받은 대중은 쉽게 공황(panic)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보다 감추어진 정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뉴스는 판단과 협상의 결과이며 기자는 진실한 정보 소스를 선호한다는 것, 기사 작성에서 마감 시한이 중요 요소라는 점, 원자력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현안이 미디어 입장에서는 항상 기사거리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투명성 자체만으로는 대중 신뢰 확보에 충분하지 않고 질과 양이 둘 다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의사 결정의 내부 절차/과정 또한 투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세션 3: 규제 활동의 투명성 제고 조건

USNRC의 홍보부 차장 Ms. Beth Hayden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외부적 활동 못지않게 규제 기관 내부의 안전 문화 확산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보수적 절차에 따른 의사

결정과 항상 묻는 자세, 안전을 중시하는 근무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05년 NRC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문화 및 사내 분위기’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내부 의사 소통, NRC 미션과 전략 계획, 직원 참여, 직원 채용 등의 항목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스위스 HSK 홍보부장 Mr. Anton Treier는 HSK는 정보 공개 활동이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법적 요건에 의거, 공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투명성 제고 규정은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문서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지적 재산권 관련 문서나 산업 비밀 등 비공개 규정에 해당되는 문서는 제한한다고 하였다.

캐나다 CNSC 홍보부장 Laurel Herwig은 CNSC의 투명성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공청회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해 관계자의 범위를 사업자와 NGO, 지자체, 각종 단체, 일반 대중이라고 규정하고, 공청회와 각종 회의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함을 밝혔다.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공청회의 자동화 (e-hearing 등 개최), 온라인을 통한 문서 공개 건수 증대, 비디오 회의 개선, 보고서의 중간 작성 단계에서의 대중 참여 허용, 대중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 및 타국이나

타기관의 관련 사례 벤치마킹 등을 들었다.

세션 4: 투명성 제고 관련 활동 사례⁷⁾

스페인 CSN Mr. Julio Barcelo는 반델로스 원전 사건에서 얻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훈에 대해 언급하고 CSN과 사업자 간 투명하고 정확한 상호 작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공개 문서 발간을 늘일 것과 커뮤니케이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회의 요구에 따라 CSN은 동사고 보고서에 대한 NEA review를 요청하였고 새로운 CSN 정보 정책(information policy) 수립이 필요하며 사업자와 CSN 간 정보 제공하는 데 있어 역할의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헝가리 HAEA 청장 Mr. Jozsef Ronaky는 2003년 헝가리 PAKS 원전의 핵연료 세정 작업 중 30개의 핵연료 다발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IAEA팀의 조사 후 최근 복구 가동(recovery operation)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 사고는 광범위한 정치적, 언론에 대한 파문을 가져왔으며 동 사건은 커뮤니케이션과 국제적 리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인해 헝가리 대중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NGO의 요구로 두 개의 헌법에 기초한 법 제정이 진행중이며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대중의 신뢰가 향상되었고 그 결과로 수명 연장 프로그램, 중·저준위 처분장 건설은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어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하였다.

핀란드의 Mr. Risto Isaksson는 올킬루오토 처분장 건설의 인허가와 관련된 언론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2002년 1월 새로운 원전 건설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결정하고 의회는 2002년 5월에 투표 결과 107:92로 승인하였으며 발전 회사 TVO가 새 원전 건설(노형 타입 선택, 계약, 부지 선정, 건설 허가 등)의 주체로 선정되었는데 2005년 2월 17일 건설 허가를 받았다. 건설사 TVO는 건설 단계에서 언론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였으며, 월간 기자 회견 및 진행 보고서 공개 등의 방법도 이용하였다.

STUK는 대중 의사 소통의 일반 정책을 따르며 STUK의 webpage

에 공개하였다. OL3 프로젝트는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핀란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설이라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EU 국가들 대상으로 원자력 규제 기관의 신뢰도를 조사하였는데 핀란드는 원자력 규제 기관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네 나라 중의 하나이다(나머지는 스웨덴,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EU 전반적으로는 1위가 과학자, 2위가 NGO, 3위가 규제 기관의 순으로 신뢰할 만한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일본 JANTI(Japan Nuclear Technology Institute)의 Mr. Tadakazu Tsuruta는 NUCIA(Nuclear Information Archives) DB를 구축하여 공개해야 할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고 하였다.

스웨덴 SKI Jr. Anders Jorle(WGPC 의장)은 2007년 7월에 발생한 Forsmark 사건에 대해 설명하였다. 안전 시스템이 설계 코드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운전 기기가 설계대로 유지되지 못했고 시험의 질이 불충분하였으므로 이 문제를 중대한 결함으로 보았으나 처음에는 언론에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

7) 본 세션은 한국 KINS의 신원기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신원장은 기초 연설을 통하여 투명성이 최근 몇 년간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는 규제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대중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공개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규제 기관이 개방적이고 투명할수록 대중의 신뢰도는 향상된다고 말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얼마나 투명해야 충분히 투명한 것인가?' 라는 의문과 함께 세션 진행을 위한 아래의 의문을 제시하였다. 즉 규제자는 어떻게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 공개하여야 할 규제 활동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규제 기관의 투명성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며 사업자 활동의 투명성에의 개입과 규제자와 사업자의 투명성의 상관 관계는 무엇인가 등이다. 그리고 한국 규제 기관은 증가하는 규제 투명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4년 전부터 매년 「원자력규제정책방향」을 정하여 공포하고 있고 또한 온라인/오프라인상에서의 정보 공개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e-mail club을 통하여 약 2,700여명에게 「주간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였고 또 사업자의 의사 결정이 늦어 간단한 보도 자료 만을 배부하였으나, 며칠 후 한 전문가가 노심용용 가능성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여 언론에 큰 파문을 가져왔다. 안전 문화의 문제점과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보도되었고 1월 Forsmark 직원이 작성한 내부 평가 보고서가 대중에게 공개된 후 언론 관심이 극대화되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언론은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며 규제자는 미디어에의 중요한 정보 제공자이다. 원전은 사전 커뮤니케이션에 소홀했고 이것이 규제자에게 문제를 발생시켰다. SKI의 외부와의 의사 소통 및 목표는 의사 결정자와 대중에게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가 즉시 제공되는 것이다.

SKI는 기술직과 Communicator로 구성된 24시간 대중 의사 소통 기능을 포함한 비상 체제를 운영하며 위기 관리 대응 체제는 다음과 같다. SKI는 모든 부서에 Acting Head가 있으며 Communicator는 기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 의사 소통의 중요한 사안은 즉시 결정되며 공식 대변인들을 결정하여 활용하고 DG는 대중 앞에 성급히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staff는 언론과의 관계 유지 교육을 받고 모든 자료는 SKI website에 등재되고 있다고 하였다.

영국 HSE 원자력 안전 Directorate Mr. Peter Storey는 THORP 사건의 교훈에 대해 설명

하였다. HSE는 Sellafield의 Thorp 원전에서 2004~2005년의 약 9개월 동안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경위를 조사하였는데 누출로 인해 83,000리터의 방사성 물질이 바닥에 쌓였으나 토지나 공기 중으로 누출되거나 인간에게 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2007년 1월 BNG Sellafield는 'Nuclear Installation Act 1965'에 의거 3차례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500,000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 분류 3등급으로 분류되었고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high hazard nuclear site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었는데 원자력산업에는 높은 기준이 필요하며 방호 장벽 기능의 저하가 없어야 하며 지도자는 운전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교훈을 원자력과 주요 산업 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워크숍 결과 정리 세션

핀란드 규제기관장인 Mr. Jukka Laaksonen(CNRA 위원장)은 본 워크숍의 발표 및 토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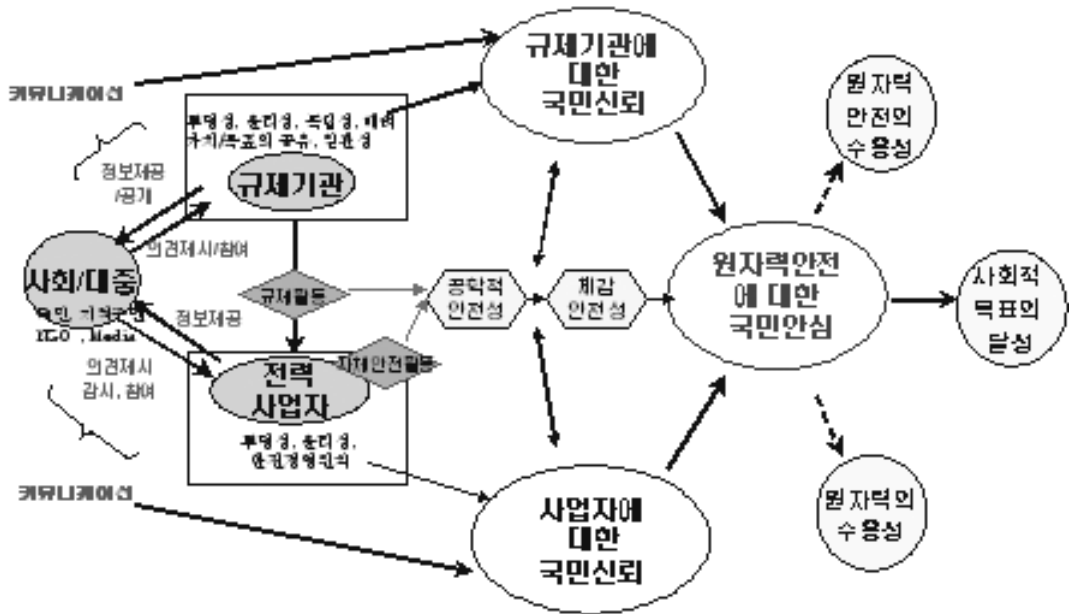
대중 신뢰는 투명성의 결과로서 얻어지며 투명성은 단순한 정보 접근성이 아니라, 규제 절차를 이해 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자-사업자 / 규제 관리-검사자 / 규제 기관-정치적 의사 결정자 간의 상호 작용이 중요하며 규

제자가 규제 역량, 공개성, 내부의 사소통 등의 신뢰성 있는 절차 투명성을 보여줄 때 규제 투명성은 대중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규제자의 투명성과 원자력산업의 투명성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해 관계자 참여와 관련이 있는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 관점에서 투명성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 세션1 투명성의 이해

규제 기관은 비상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정보의 원천으로서 위치를 구축하여야 되어야 한다. 규제 기관이 실수나 불확실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대중은 Zero Risk를 원하게 될 것이며 거짓, 정보 비공개 등은 영원한 신뢰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 적시에 이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관 전체보다는 대변인(들)을 활용하여, 즉 믿을 수 있는 인물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교환을 위하여 공청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션 2 이해 관계자의 기대

정보의 자유에 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해 관계자 참여에 대한 국제 기구의 지침이 필요하다. 내부 투명성을 향상시키면 자연히 외부적 투명성도 향상되며 기자단 교육 등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적극적 의견 수렴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공청회를 의사 결정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규제 기관의 중장기 구체적 정책 개발에 대한 정보 제

규제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모델



〈그림 1〉 규제 기관과 사업자에 대한 국민 신뢰와 안심 모델

공이 중요하다. - 세션 3 투명성
확증의 조건

그리고 규제자와 사업자의 공동
의사 소통이 중요하고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증가되기
전에 상황을 고백하고 잠재적인 안
전 우려 사항들을 조사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신뢰를 잃게 되면 공
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초청하여
직접 사고 결과를 전달토록 활용하
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세션 4 투
명성 제고 사례

투명성 측정을 위해서 여론 조사
를 통한 대중 신뢰의 측정 방법이
유용하며, 정보 접근성의 보장, 결

정 사항 설명 등의 특정 수준을 정
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
다. - 세션 5 투명성의 측정

원자력 안전 규제의 투명성

이상 워크숍에서 발표되고 논의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안전
규제의 투명성에 대하여 종합적으
로 토의하여 보기로 한다.

1. 규제의 목적과 신뢰와 투명성

원자력 안전 규제는 사업자의 전

력 생산을 위한 건설, 운영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다. 이는 또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기도 하다.

규제의 목적은 사업자의 안전 활
동에 대해 사회가 수용 가능한 수
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지를 국민
을 대신해서 확인하는 것이며 이에
미흡할 경우 시정 조치를 강제함으
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
다. 또한 정부가 규제 활동을 함으
로써 안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안
심을 제공하는 것이 그 궁극적 목
적이다. 이러한 안심 제공에 필요
한 요소로서 규제 기관에 대한 신
뢰가 있고 그 한 요소로서 투명성

이 있다.

<그림 1>은 원자력 사업자, 규제 기관, 대중 혹은 국민 등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주요 활동과 이들의 상호 작용, 그리고 안전성과 신뢰 그리고 안심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규제 기관과 사업자의 투명성이 각각 이들에 대한 신뢰의 주요 요소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규제 기관의 규제 활동의 투명성과 함께 사업자의 운영 활동의 투명성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원자력 안전에 대한 안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기관의 몫이 있고 그리고 사업자의 몫이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그 요소로서 사업자의 운영 활동의 투명성도 중요한 것이다.

2. 규제 투명성의 개념과 정치 경계

원래 투명성이란 소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부에서 들여다 볼 때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 즉 불투명하여 전체 모양이 흐리게 보이거나 왜곡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가리거나 하지 않는, 즉 숨김이 없는 상태로서 '수동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규제 기관이 정보를 정리 가공하여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규제 투명성이라고 보는 추세이다. 즉 '적극적인 투명성'을 지칭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다. 이는 원자력 관련 정보들이 어렵고 전문성을 띠는 만큼 단순히 '숨기지 않음' 혹은 '드러냄'만 가지고는 이해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공개성(openness)이 오늘날의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투명성과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본다.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의 내용과 안전성 확보 활동들을 적절히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중들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바쁘므로 항상 언제나 규제 활동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므로, 이때 '적극적'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8월 원자력 이용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우라늄 분실 소각 사건은 이 사건이 인지되었을 때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미흡하여 원자력 이용자의 업무의 투명성에 손상을 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입은 신뢰의 저하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⁸⁾.

특히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는 한 국가의 안전 규제 활동은 국내에서 대중들에게 공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규제자와 일반 국민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리의 문제(agency problem)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일으키는데, 즉 대중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함으로 해서 사업자나 규제 기관은 주인(principal)인 국민보다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⁹⁾.

3. 국제적 투명성

그리고 오늘날 안전 규제 활동은 국제적인 투명성도 확보하여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안전협약의 무사항으로 부과된 국가보고서의 작성과 웹을 이용한 정보 공개 사이트의 운영에 의하여 각 체약국들은 국가보고서와 안전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으며 또한 웹에 중요 사건 발생시 즉각 그것을 신속하게 게시한다. 이러한 사이트를 영문으로 운영해 줄 것을 국제적으로 요구받고 있는데 이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 시설 보유국들의

8) 이 문제는 단순히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과 관련한 투명성과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투명성인 핵비확산의 국제적인 투명성과도 관련되는 대단히 복잡한 이슈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원자력 이용 시설 운영자의 투명성에 큰 손상을 입힘으로써 앞의 모델에서 제시한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안심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하겠다.

9) 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산업> 2004년 7월호 필자가 발표한 논단 '누구를 위하여 규제할 것인가-원자력 안전 규제의 '대리' 문제' 고찰'을 참고하기 바란다.

원자력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정보가 국제적으로 공개되는 것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이미 3차 안전협약 검토회의시 회의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정보와 사업자 및 규제 기관의 활동의 국제적인 투명성은 대세이며 이것이 지구적 안전성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의 원자력 시설에 안전 관련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질 경우 해당국 그리고 해당 원자력 시설을 보유한 전력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반발 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투명성과 기밀성(confidentiality) 간의 조화 문제가 등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투명성의 확보에 있어서 이 문제는 관련국들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4. 내부적 투명성

규제 기관 내에서도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것이 부족할 경우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 문제가 발생한다. 내부 고발자는 규제 기관 내부에서 안전 문제를 다루는 경영층의 행태나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인식될 경우, 자신의 기술적인 의견이나 판단이 경영층에 의하여 이유 없이 무시되었

다고 느낄 경우,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공중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배치될 경우 외부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이것이 내부 고발자 문제이다.

일단 내부의 사람이 규제 기관의 내부 문제를 외부에 흘림으로써 사회가 주목하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외부의 조사 등이 이루어지면 그 기관은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런 측면에서도 내부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¹⁰⁾

5. 투명성의 부작용

투명성은 곧 정직성이며 이는 가리거나 속이거나 은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투명성의 중요성은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 라는 말과도 유관하며 ‘투명성이 최고의 정책이다’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명성은 가공되지 않은 정보 그대로를 공개하는 혹은 공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전문가인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가 그대로 여과 없이 공개될 경우,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 가공되어 사용되거나 전파될 경우, 이들이 일으킬 수 있는 불안 조성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역사적으로 사전 검열 등을 관행화해왔으나, 오늘날에는 장기적으로는 투명하지 않음으로 인한 폐해와 비용과 공개함으로 인한 이익을 비교할 때 공개하는 것이 더 편익이 크다는 것이 입증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개의 부작용이란 대중에게 불이익을 끼치기보다는 담당자나 해당 기관에 대하여 불리함을 종종 의미하기 때문이다.

6. 투명성과 이해 관계자 참여

투명성이란 그 용어에서 보듯이 이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다 봄’을 전제로 한다. 이는 규제 과정에 이해 관계자가 ‘참여’함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이 투명성은 규제 기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 규제 과정에의 참여, 규제정책과정에서의 참여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투명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제 과정에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논의되는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란 협치라고도 번역되는데 종래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치하고 간섭하는 개념으로부터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에 협동하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춘다는 의미

10) 내부 고발자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산업> 2007년 1월호에 필자가 발표한 논문 ‘괴로운 호루라기의 정치심리학-내부 고발자 문제의 이해와 대응 방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에서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규제 활동의 투명성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 사업자의 운전 투명성과의 관계

앞에서 보았듯이 사업자의 운전 투명성은 규제 기관의 궁극적인 목표인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안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자의 투명성에 규제 기관이 관여하지는 않고 있고 공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개입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규제 기관이 노력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그 부분을 이루는 사업자의 운영 활동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규제 기관만의 노력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안심 제공이라는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사업자에 대한 국민 신뢰와 사업자의 운영 투명성에 대하여 규제 기관이 어떠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 논의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규제 투명성 현황과 확보 노력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은 전력 사업자가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으로서 대중으로부터 공개성의 확보, 투명성 등을 요구받아 온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보 공개 요구를 덜 받아왔다.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과거부에는 공보관실이 있으나

이는 원자력 안전 규제에 대한 대중 접촉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원자력안전과가 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 공표되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정책방향을 분석해보면, 2002년에는 원자력안전현장 정신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안전 정보의 신속, 투명한 공개 및 국민의 의견 수렴’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보다 세부적으로는 ‘원자력 안전 시민참여 간담회, 안전위원회 개최, 인터넷 정보 공개 행정의 지속적 추진’을 제시하였다.

2003년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민 참여형 원자력 안전 규제 추진’을 정하고 ‘원전 성능 평가 공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운영’을 제시하였다.

2004, 2005, 2006년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가 2007년에는 기본 방향으로 ‘민주와 공개의 원칙하에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정보공개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오프라인상에서의 정보 공개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e-mail club을 통하여 약 2,700여명에게 「주간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해 관계자들은 주로 4개 원전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하여 각종

정보 요청을 하고 있으며 경실련, 환경연합 등의 NGO 들과 지역 언론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이 투명성과 공개성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이다.

투명성 대응 방안과 향후 전망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투명성은 평상시에 규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언제나 이해 관계자들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원자력 시설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에 신속하고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규제 기관의 투명성 관련 이슈는 무조건 무한대로 투명해져야 한다는 논리 이전에 투명성의 본질과 배경, 정치적인 함의를 숙지하고 이를 규제 기관 정책 결정자와 규제 요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기술적 내용을 보다 쉽게 일반 용어로 풀어 쓰는 전문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웹을 통한 규제 기관의 전문가들의 역량의 공개 등도 중요한데, 오늘날 규제 기관의 웹사이트는 이미 규제 투명성의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질의에 응답이나 자료 요구에 대한 회신 등도 인터넷이나 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은 급격히 확보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이상 투명할 수 없는 경지로까지 이행할 것이다. 규제의 경

우 이로 인한 사업자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피해의 문제, 불확실한 정보의 유출 및 전파로 인한 사회심리학적 불안의 조성 등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여 나가야 한다.

규제 기관은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에게 안전에 대한 안심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공익을 위하여 앞으로 거의 무한대의 정보 공개와 규제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안전 정보에의 대중들의 접근권 요구, 모든 회의 진행의 인터넷 공개 요구, 모든 보고서의 공개 요구 등이 그것이다.

궁극적으로 대중들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행정 기관 혹은 규제 기관의 전자 문서 결재 체계에의 접근권을 요구해오게 될지도 모른다. 즉 모든 규제 활동을 국민들이 감시하는 체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인 바, 유비쿼터스 감시 체계가 도래하면 규제 기관은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규제 자료와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는 일, 투명성 유지와 이로 인한 오해를 해명하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일이 더욱 큰 자원을 요구

할 것이며, 이는 더욱 많은 전문가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개는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즉 사업자가 완전히 스스로 투명해진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며 그 경우 규제 활동으로 개입할 여지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는 국가 입장에서는 규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공개(information disclosure) 등으로서 규제의 대안으로서 학자들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맺음말

규제의 투명성 확보는 국제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국내적인 사회 환경 변화를 볼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구축된 정보 통신 인프라를 고려할 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식을 볼 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이에 대하여 규제 기관이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이를 빨리 인지하고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Honesty is the best policy)” 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직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직함은 단기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주어진 임기 동안 일을 하는 규제 전문가나 규제 기관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투명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규제 활동의 투명성이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안심을 가져다 줄 것인가? 국민 안심을 단번에 얻을 수는 없겠지만 이를 위하여 규제 기관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얼마나 투명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모두가 우려하는 바 투명성으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과제라 할 것이다. ☸

본고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Dan Lecca